

「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」 제1차 합동분과위원회 개최결과안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) '26. 3. 10.(화) ~ 3. 13.(금), 4일간
- (방식) 서면회의
- (안건) 2025년도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계획(안)에 대한 검토(기후대응위 사무처)
- (검토) 기후변화정책 분과위원 7명, 녹색성장·산업전환 분과위원 11명,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 7명

□ 주요 논의결과

- 이행점검단 구성·운영 : 분과위·실무점검반·점검자문단의 상세 역할·지침·일정의 사전 공지와 점검과정 공유 필요
 - 실무점검반·점검자문단도 분과 단위 운영이 필요하며, 정책·노동·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 확대와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전문기관 참여도 필요
- 이행점검 추진 : 국기본-온실가스이행 점검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, 점검 결과의 대국민 공개 확대 필요
 - 실적제출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부 부처 독려, 자료협조와 관련한 지표 신설 검토 필요, 분과위의 데이터 접근성 확대
 - 국기본에 현재 수립되어 있는 부처별·연차별 이행계획에 대하여 점검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필요
 - 온실가스 감축목표 점검 과정에서 소관부처가 감축목표 미달성 사유를 분석하여 제출토록 하고, 부문별 핵심 성과 지표 설정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핵심 지표 위주로 점검 추진 필요

- 최종보고서 공개 이후 단계별 조치 기준 및 책임소재를 명확화 하고, 우수성과 인센티브 부여, 반복적 부진 과제 관리 강화 등
- **이행점검 고도화** : 탄소감축경로관리시스템으로 전환 검토, 외부 독립검증 절차 도입, 점검기간 추가 확보, 점검 대상 부처의 자료 제출 및 소명 의무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
- 점검결과에 대하여 정부성과 평가, 부처평가 연계, 차년도 정책·예산 환류 강화 등 공표 이상의 제도적 책임 체계 마련, 이행점검 후속조치를 위해 위원회의 부처 간 조정 권한 강화 필요

□ 조치계획(안)

- **이행점검단 구성·운영** : 실무점검반 구성 이후 점검위원들과 논의해 분과 운영, 역할, 지침 등을 포함한 이행점검 상세내용을 공유하고, 점검 진행 간 보고 예정
 - ※ 실무점검반, 점검자문단 구성 시 정책·노동·산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,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기관 참여 예정(별도 용역)
- **이행점검 추진** : 국기본 점검과정과 온실가스 실적분석의 실무 전문가를 동일하게 유지, 위원회 차원의 각 기관 자료제출 독려(협조 공문 발송), 점검결과 공유를 위한 성과공유회 확대 개최 예정
 - ※ 실무점검과정에서 자료협조 유도 등에 대한 추진 방향 전파, 연차별 이행계획 검토를 위한 관련 자료공유 등을 추진하는 한편, 부문별 핵심성과 지표 설정, 소관부처 감축목표 미달성 사유 분석·제출 방안 등 검토
- **이행점검 고도화** : 사무처의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주요 의견들의 반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이행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
 - ※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(예: 공표 이상의 책임부여 등), 당해연도 일정 및 예산 등의 한계로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(예: 중간평가, 외부 독립검증 절차 등), 실무적인 지침·지표 개발 필요 사항(정부평가 반영 등) 등 고려, 추후 이행점검에 반영 검토